

KMI 동향분석

VOL.203
2025 APRIL

발간년월 2025년 4월(통권 제203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최상희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홈페이지 www.kmi.re.kr
※ 본문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또는 발언자)의 견해이며,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해양수산업 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목차

■ 개요	3
■ 수산	6
■ 해운	10
■ 항만	15
■ 물류	19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 공급망 불안정, 세계 및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각국은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국내외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수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호 동향분석에서는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현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수산 분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 관세 인상으로 인해 국내 수산업계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수산물 관세 부과는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對)미 수산물 수출은 최대 9.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 오징어, 가공 굴 등 주요 경합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중국의 대(對)미 보복관세 부과 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미국산과 경합도가 낮아 수출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수산업계는 관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격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이 필요하며, 정부는 관세 정책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과 경합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위생검역, 인증제도 변화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빠른 대응도 요구된다.

(해운 분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는 다시 한번 세계 무역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관세 10% 부과 시 세계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가속화,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세계 해상무역 톤-마일은 0.3~1.5%p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의 대(對)중 관세 부과 시 양국의 의존도 감소를 위한 소비 위축 및 교역 상대국 다변화로 세계 해상무역 톤-마일은 0.1~0.8%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해운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해운기업은 교역 다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항로를 최적화하는 한편, 신규 항로를 개발하고 영업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항만 내 선박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정시 운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터미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및 재정비 항로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선사와 화주 간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민관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항만 분야) 관세 적용 형태 및 범위에 따라 항만물동량 영향은 유동적이나, 전반적으로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물동량 증가율 하락이 우려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시행되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단기적으로 0.74~0.92%p(22.3~27.6만TEU), 비컨테이너는 1.08~1.34%p(620~768만톤)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부산항 등 주요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배후단지를 생산기지로 전환해 글로벌 제조 수요를 유치해야 한다. 항만시설의 범위와 기능을 국가경제 지원 관점으로 확대하고, 국내 하역장비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환적화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북극항로 대비 등 중장기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물류 분야)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 조치 및 미국 내 해외직접 투자 확대를 유도하면서 글로벌 물류시장과 공급망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편관세 도입은 미국 내수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대(對)중 관세 강화는 우리 기업의 대(對)중 중간재 수출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인도, 남미, 태국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중심 공급망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새로운 수출입 경로 확보와 생산기지 다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물류거점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는 민간 물류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수출입 물류경쟁력 제고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 물류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내 제조기반 구축 강화 시나리오에 대비한 국내 제조인프라 및 물류 네트워크의 구조 개편도 병행해야 한다.

개요

김민수 경제전략연구본부 본부장
(guan72@kmi.re.kr/051-797-4787)
김주현 경제전망·데이터연구실 실장
(jhkim@kmi.re.kr/051-797-4636)
김성은 경제전망·데이터연구실 전문연구원
(sekim@kmi.re.kr/051-797-4769)
오예진 연구기획관리실 전문연구원
(ojy1115@kmi.re.kr/051-797-4517)

트럼프 2기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우려, 해양수산 분야 영향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트럼프 2기 행정부, 특정 국가 및 품목 대상 고율 관세 조치로 국제 통상환경 변화 초래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대외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연이어 발표했음
- 이러한 관세 조치는 상대국의 보복관세 조치를 유발하며 글로벌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함
-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동향분석에서는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영향 분석을 통해 국내 해양수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진단 및 정책 대응방향 제시

- 이번 호 동향분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국내 해양수산 분야에 미칠 영향을 계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관세 부과가 해양수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함께 중국산 제품 최대 60% 관세 부과, 전 국가 대상 10% 보편 관세 도입 등의 시나리오 분석에 근거해 영향을 분석하였음
- 관세 정책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통해 국내 해양수산업 수출 여건, 가격경쟁력, 물류망에 미칠 영향을 토대로 정부 및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은 글로벌 교역 위축과 국내 산업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호무역 강화와 고율 관세 부과로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시도

-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하여 ‘안전한 미국 재건’, ‘에너지 자립과 경제 활성화’, ‘정부 개혁과 부패 청산’ 그리고 ‘미국의 가치 회복’이라는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으며, 상기 정책 과제에 따라 취임(2025.01.20.) 이후 100여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수입 의존도 감소를 목적으로 주요 무역 대상국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관세 부과 대상국(중국, 캐나다, 멕시코)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발표했음
- 앞으로 미국의 관세부과와 이어지는 각국의 대응 조치들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글로벌 무역을 둘러싼 각국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음

〈표 1〉 대상 국가별 관세 정책 및 대응

대상 국가	발표일 (시행)	트럼프 행정명령	발표일 (시행)	대상국 대응 조치
모든 국가	2.1. (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강 및 알루미늄(25%) 관세 부과 - 일부 국가 면제 철폐, 캐나다·멕시코 포함 		
	2.18.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의약품(검토중) 석유 및 천연가스(검토 예정) 		
중국	2.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수입품(10%) 관세 부과 	2.4.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기업(25곳) 수출, 투자 제한
			2.6.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에 제소 절차 개시
	3.4.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관세(10%) 부과 * 총 20% 	2.4.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복관세 부과 - 농축산물(10~15%) - 석탄·LNG(15%) - 원유·농기계·자동차(10%)
캐나다	2.1.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에너지 제품(25%) 관세 부과 에너지(원유·천연가스) 관련 제품(10%) 관세 부과 * 국경 지역 마약 밀반입 단속 강조 	3.4.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화장품, 가전, 펄프·종이, 플라스틱 제품 등(25%) 관세 부과 * 1,256개 제품, 208억 달러 수준
	3.5. *1달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 		
	3.6. *1달 유예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품목에 대해 한시적 관세 면제 - 비에너지제품(25%) 중에서 한정 	3.4.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 식품, 전기자동차 관세 부과 * 870억 달러 수준 주요 광물, 에너지(검토 예정)
멕시코	2.1.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수입품(25%) 관세 부과 * 마약 조직 및 불법이민 단속 강화 요구 	→	
	3.5. *1달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 		
	3.6. *1달 유예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품목에 대해 한시적 관세 면제 	3.1.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수준 보복 관세 예고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타격을 것으로 전망

자료: The Guardian, Reuters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 2025.03.12.)

■ (세계 경제) 보편 관세 확산에 따른 세계 교역 위축과 성장률 하락 우려

- (단기) 미국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무역 불균형 심화, 농업 및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 등 파급효과가 예상됨
- (중기)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 회복과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이 보복관세를 시행할 경우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표 2〉 트럼프 2기 관세 부과 시나리오(중기)

유형	예상 조치	주요 국가
보편 관세	모든 국가 대상 10% 일괄 관세	전 세계
보복관세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대응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
자동차 관세	25~35% 관세 유지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독일
배터리·반도체 보호	보조금 확대 및 중국산 배제	중국, 한국, 대만
철강·알루미늄 관세	10~25% 관세 지속	캐나다, 한국, EU

자료: KOTRA, 현대경제연구원

- (세계 GDP) 미국의 관세율 인상은 세계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IMF는 2025년 세계 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3.2%) 대비 0.1%p, 2026년 0.2%p, 2027년 이후 0.3%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음

■ (국내 경제) 보편 관세 시행 시 국내 산업별 수출 위축 및 거시경제 파급 우려

-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영향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보편 관세가 시행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13.1% 감소, 부가가치는 7.9~10.6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산업별로는 자동차 -5.9~-13.6%, 반도체 -4.7~-8.3%, 전기전자 -8.8~-18.1% 수준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며, 경쟁국 대비 관세 수준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음
- 철강·화학·기계 산업은 대체 시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며, 자동차·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제조업 경기 둔화로 인한 국내 생산량 감소와 고용 위축 가능성이 제기됨
- 일부 품목에서는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수입시장 축소로 인한 전체 시장 규모 감소 효과를 모두 상쇄하기에는 부족해 전반적인 대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 국내 GDP는 2025년 기존 전망 대비 0.1%p, 2026년 0.3%p, 2027년 이후에는 0.4%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폭 축소에 이어 2025년 이후 추가 악화가 예상되며, 국내 투자 둔화 및 해외 생산기지 이전 확대가 예상됨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원화 약세가 우려됨

(수산) 수산물 수출 영향 전망 및 대응방안

김대영 수산정책사업본부장

(mobydick@kmi.re.kr/051-797-4531)

한기욱 해외시장분석센터 전문연구원

(hankiuk@kmi.re.kr/051-797-4902)

신진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hinjaw@kmi.re.kr/051-797-4527)

트럼프 1기,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산물 무역 시장 변화

■ 세계 최대 수산물 수출입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양국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무역 시장의 변화를 야기

- 미·중 무역 분쟁 이전 미국과 중국 양국 간 무역 의존도는 12~14% 수준이었으나, 무역 분쟁 이후 10%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양국은 해당 국가의 무역 구조(특화 품목 중심)를 고려하여 대체 무역국을 발굴하였음
- 미국은 냉동 원물을 중심으로 수출, 냉동 필렛과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수출입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냉동 필렛과 수산가공품을 수출하고 냉동 원물을 수입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미·중 무역 분쟁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서 '기회' 요소로 작용

- 미·중 무역 분쟁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업계에 '기회'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수입재수출 품목(명태, 대구)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음
- 한국의 對미국 수출 증가 품목은 참치(냉동 필렛)와 굴(가공품)과 같은 가공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對중국 수출 증가 품목은 대구와 게, 넙치 등 냉동 수산물과 수입재수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트럼프 2기, 미국 관세 부과로 다양한 경로로 무역 시장에 전파

■ 트럼프 2기는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어, 다양한 경로로 무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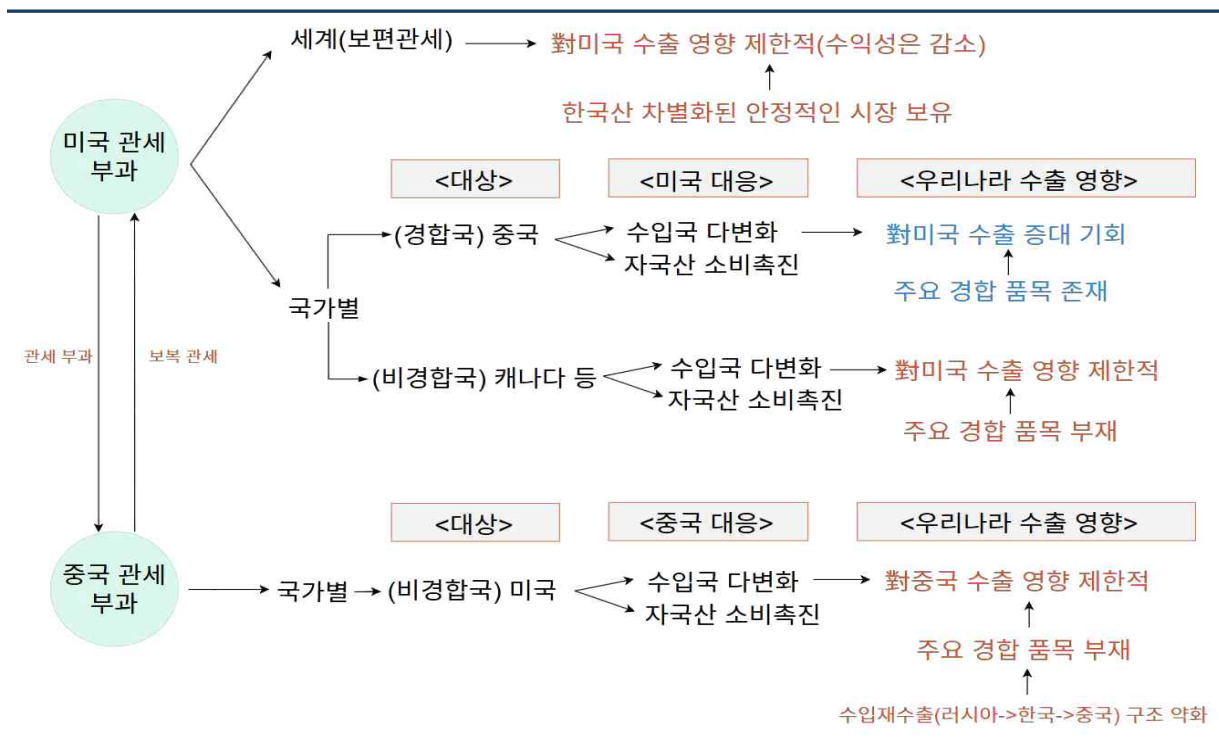
- 트럼프 2기의 관세 부과 대상 확대는 세계 수산물 시장에 수출입국 다변화 및 자국산 소비 촉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국과 중국은 상호 간의 수산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국을 모색하고 있음. 미국은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발굴하기 위해 아세안, 남미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오세아니아와 러시아 등 다양한 수출입경로를 발굴하고 있음

■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미국의 보편관세 인상에 따라 수출업계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되나, 對미국 수출시장 확대 기회도 함께 존재할 전망

-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업계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며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어 위협 요인으로 작용되나, 중국산과 경합이 높은 품목(김, 오징어, 굴(가공) 등)은 가격경쟁력 개선으로 인해 중국산 물량 대체를 통한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수산물 경합도는 낮아,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 시장에서의 기회가 감소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간 직접 무역 비중이 확대되고 중국의 항만경쟁력이 향상되면서 한국을 경유하는 수입재수출 무역 구조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함

〈그림 1〉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미국의 관세 부과 확대, 우리나라 수산물의 '기회' 및 '위협' 요인 공존

■ (시나리오 1: 보편 관세 부과) 우리나라는 미국 내 안정된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업계의 수익성 악화 우려는 존재

- 미국이 모든 국가에게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對美 주요 수출 품목은 김과 이빨고기로, 미국산과의 경합 정도가 낮고 한인시장 등 차별화된 시장을 보유해 보편관세로 인한 수요 감소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전가가 완전하지 못할 경우 수출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시나리오 2: 중국산 관세 부과) 미국의 對중국 관세 부과 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1.65% ~ 9.9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이 중국산 수산물만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중국이 미국 수산물 시장에서 경쟁하는 품목은 김, 오징어, 굴(가공) 등이며, 중국산 수산물의 관세 부과는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표 1〉 美 관세부과 시나리오에 따른 수산물 수출 영향 전망

시나리오 구분		관세	전망	비고
미국 시장	보편 관세	10% ↑	수출 영향 제한적 * 단, 수익성 악화 우려	미국산과 경합(低)
	對중국 관세	10% ↑ ~ 60% ↑	1.65% ↑ ~ 9.90% ↑	중국산과 경합(高) * 김, 오징어, 굴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 (시나리오 3: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중국의 對미국 보복 관세 부과 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미국산과의 경합도가 낮아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한편, 중국의 對미국 수산물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확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수산물 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품목은 명태, 대구 등 일부 품목이 있으나, 해당 품목은 우리나라의 직접 수출이 아닌 수입재수출 품목이며,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우리나라의 수입재수출 무역 구조가 악화된 상황으로 수출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표 2〉 美 관세부와 시나리오에 따른 수산물 수출 영향 전망

시나리오 구분		관세	전망	비고
중국 시장	對미국 관세	10% ↑ ~ 60% ↑	수출 영향 제한적	미국산과 경쟁(低)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미국의 관세 인상 시나리오별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 관세부와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과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 필요

- 미국 정부의 관세부와 정책과 영향은 보편관세 부과, 중국산 수산물 관세 부과, 중국산 수산물 관세 부과에 따른 중국의 미국산 수산물 보복관세 부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정책에 따른 영향과 시장 동향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격경쟁력을 강화 및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원재료 조달 최적화, 생산 공정 효율화와 같은 원가 절감, FTA 활용 및 통관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수익성 유지, 미국 내 대형 유통망(코스트코, 월마트 등)과의 협력을 통한 유통망 효율화를 통한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함
- 중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수산물의 마케팅 강화 및 수산물 경쟁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중국산 대비 품질 우위 홍보를 위한 프리미엄 인증 및 이미지 강조, 한류 트렌드 및 건강식품 인식 활용한 국산 수산물의 판촉 이벤트, 외식업체·식품가공업체 대상 적극적인 판촉 및 거래선 확대를 통한 유통망 다각화 전략이 필요함
-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산 대체 수산물 시장을 공략하여 수출 다변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해당 시나리오 발생 시, 중국 내 대체 시장 진출, 한·중 가공업체 협력 강화 기회 등을 활용하여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더불어 위생·검역, 인증제도 변화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요구

- 미국의 높은 수입위생조건 및 검역 기준 변화에 대비한 사전 정보 수집 체계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원산지 표시, 라벨링 등 통관 요건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수출업체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수출업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산·학·연·정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함

(해운) 해운시황에 미치는 영향 전망 및 대응방안

이호춘 해운연구본부장

(leehochoon@kmi.re.kr/051-797-4623)

황수진 해운시장연구실장

(zin@kmi.re.kr/051-797-4635)

류희영 해운경영·금융연구실장

(hyryu@kmi.re.kr/051-797-4634)

김병주 해운시장연구실 전문연구원

(bjkim17@kmi.re.kr/051-797-4628)

트럼프 1기, 마중 무역전쟁이 촉발한 세계 해상무역 구조 변화

■ 2018년 시작된 마-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해상무역 구조 변화를 초래

- 2018년 7월 미국이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본격화됨
- 이후 약 1년 반에 걸쳐 협상과 충돌이 반복되었으며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합의안' 체결을 계기로 갈등은 완화의 전환점을 맞이함
- 무역전쟁은 단순한 교역 규모 축소에 그치지 않고 각국이 수출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시장을 모색하는 등 결과적으로 세계 무역 구조의 변화를 초래함
- 특히 중국과 미국은 상호 수출 화물 구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 중국은 공산품을 중심으로 미국에 수출하며 이는 주로 컨테이너선을 통해 운송됨. 반면 미국은 곡물과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중국에 수출하며 이는 주로 건화물선을 통해 운송됨

■ 마-중 무역전쟁은 양국 경제성장 둔화, 소비 위축 및 교역 감소를 촉발하며 컨테이너 시장의 구조적 변화 유발

- 2018년 하반기에는 고율 관세 회피를 위한 조기 선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물동량이 증가함. 이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적 일정을 앞당겨 재고를 비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임
- 그러나 무역전쟁은 미주 항로의 물량 급감을 초래하였으며 동시에 중국 공장으로 향하던 중간재 물량도 감소함. 중국 내 일부 제조시설이 탈중국화하며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이전해 동남아 수출이 증가하고 교역 패턴의 변화가 나타남

■ 미국산 농산물(대두)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이후 브라질이 최대 곡물 수출국으로 부상하며 건화물 시장의 무역 흐름 재편성

-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대두에 25% 관세를 부과함. 이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대두 수출 비중은 기존 60.1~65% 수준에서 2018년 19.7%로 급감함
- 중국은 고율 관세 부과 이전에는 미국산 대두를 선구매 방식으로 확보하며 수입을 늘렸으나 이후에는 수입처를 브라질로 전환함
- 그 결과 2018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전년 대비 74.1% 감소한 809만 톤을 기록했으나 브라질산 대두 수입량은 전년 대비 27.4% 증가한 6,701만 톤에 달함
-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대신하여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에 브라질로부터 대두를 수입하던 다른 국가는 미국산 대두로 수입처를 전환하게 됨
- 이러한 무역전쟁을 계기로 중국은 대두 수입처를 미국에 국한하지 않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함

트럼프 2기, 주요국 교역 패턴 변화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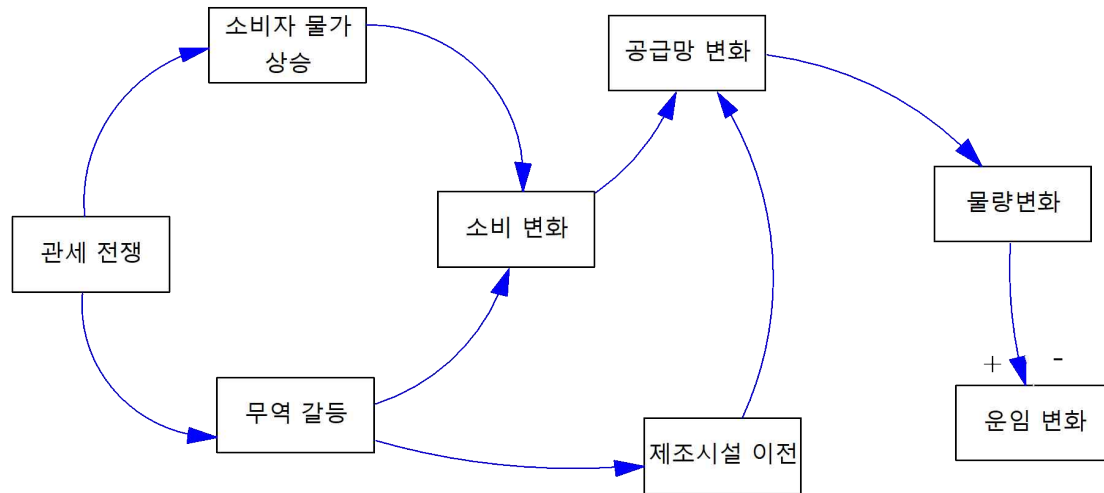
■ 미국의 관세 부과는 소비 위축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구조에 따라 톤-마일 변화 전망

- 관세 부과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로 운송거리가 증가해 톤-마일은 늘어날 수 있으나 리/니쇼어링이 가속화 시 교역량 축소로 인해 톤-마일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관세 부과는 농산물 교역 구조와 북미 원유 무역 구조의 변화 촉발

- 중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곡물 수입처를 전환하여 무역 구조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톤-마일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는 사우디 등의 대체 수입처 확보에 따라 톤-마일이 증가하나 장기적으로는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관세 부과가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 KMI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세계 해상무역 톤-마일 축소 전망

■ 보편관세 10% 부과 시 세계 해상무역 톤-마일은 0.3~1.5%p 감소 전망

- 전 세계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가속화,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며 세계 해상무역 톤-마일은 0.3~1.5%p 감소 전망

* 컨테이너선 톤-마일은 1.3%p 감소, 건화물선 톤-마일은 1.5%p 감소, 유조선 톤-마일은 0.3%p 감소 전망

■ 미국 대(對)중 관세 부과 시 세계 해상무역 톤-마일은 0.1~0.8%p 감소 전망

- 양국의 의존도 감소를 위한 소비 위축 및 교역 상대국 다변화로 세계 해상무역 톤-마일은 0.1~0.8%p 감소 전망

* 컨테이너선 톤-마일은 0.6~0.7%p 감소, 건화물선 톤-마일은 0.6~0.8%p 감소, 유조선은 0.1%~0.2%p 감소 전망

〈표 1〉 美 관세부와 시나리오에 따른 해상무역 톤-마일 변화 전망

시나리오 구분		전망	
관세 부과	보편관세	컨테이너	1.3% ↓
		건화물	1.5% ↓
		유조선	0.3% ↓
	對중국 관세	컨테이너	0.6% ↓ ~ 0.7% ↓
		건화물	0.6% ↓ ~ 0.8% ↓
		유조선	0.1% ↓ ~ 0.2% ↓

주: 현대경제연구원(24.11)의 트럼프 정부 관세 시나리오에 따른 세계 교역량 증가율 영향을 토대로 추정

자료: 클락슨, KMI

세계 교역 패턴의 변화에 탄력적 대응 필요

■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해운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해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 시점 확보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필요

- 미국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해 정부는 선제적으로 기업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운의 실정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함께 세계 해운 시장(운임, 해상물동량 등)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운항 정보 등과 연계하여 정량적으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아울러 미국 관세 부과 범위와 강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정량적 분석 방법을 개발되어야 함
- 동시에 우리나라 해운기업과 해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병행해야 함

■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교역 다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운기업은 기존 항로를 최적화하고 신규 항로의 개발 및 영업력 강화 필요

- 아시아-미주 항로의 물동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항로를 유럽, 중남미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운임 변동성에 대응하고 영업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아세안, 아프리카 등 신흥국과의 교역을 확대하여 미국 시장의 접근성을 유지하려는 움직임과 동시에 유럽의 상품무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아시아-유럽, 중동-아프리카 간 물동량 증가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항로 개발 및 기존 항로의 선대 재배치가 필요함
- 미국은 중남미와 동남아로의 교역 다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동남아 및 중남미와 미국 간 해상 수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기존 미주 항로를 중남미 및 동남아 경유하는 방식으로 재조정하거나 신규 항로 개발이 필요함

■ 국가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해외터미널 확보 지원

-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신규 항로 개척 및 기존 항로 재정비 움직임과 연계해 항만 내 선박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정시 운항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해외터미널 확보가 요구됨. 특히 올해 2월 신규 얼라이언스 출범 후 정시성 확보 중요성은 더욱 부각됨
- 세계 주요 해운기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터미널 지분을 확대하거나 인수하고 있으며 자사의 터미널을 이용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고 항만 내 대기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선박의 정시성을 확보함
-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규 항로 개설 및 서비스 개편에 따른 해외터미널 확보가 필수적이나 해외터미널 확보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물동량 확보와 연계한 투자 리스크가 수반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해외항만 투자 전략 수립 및 민관 협력체계 마련이 요구됨

■ 선-화주 간 실효적 협력 지속을 위한 정부 주도의 협의체 운영

-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아시아-미주 간 해상물동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아시아-유럽, 중동-아프리카 등 신규 항로·서비스 개발 및 선대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신규 항로 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주와 화주 간 장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기업은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고 화주는 운임의 안정성과 선박 우선권을 확보 가능함
 - 그러나 해운 시장의 변동에 따라 선주와 화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 가능성에 대비하고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민관 협의체 운영이 필요함
 - 해당 협의체는 선주와 화주 간 이견을 조정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 장기 계약 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협력 매커니즘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 * 2018년 '해상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대한상의·무역협회·해운협회)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선-화주 간 협력체계 지속 확대

(항만) 컨·비컨 항만물동량 영향 전망 및 대응방안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gskim@kmi.re.kr/051-797-4681)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schoi@kmi.re.kr/051-797-4777)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lny@kmi.re.kr/051-797-4697)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jh.gary.shin@kmi.re.kr/051-797-4695)

트럼프 1기 관세정책은 일부 품목에 제한적 영향

■ 맞춤형 관세정책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제한적 영향

- (철강·알루미늄) 트럼프 1기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가 추진되었으며, 외교적 협상을 통해 철강은 관세 면제 대신 쿼터제* 수용, 알루미늄은 10% 관세가 적용됨

* 대미 철강 수출량을 '15~'17년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으로 제한

- (자동차)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관세 적용은 면제되었으나, USMCA 협정에 따른 북미산 부품 사용 비중 상향 및 중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 등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일부 간접적 영향을 받음

*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시점을 기존 '21년에서 '41년으로 연기

트럼프 2기, 항만물동량 영향은 유동적이나 불확실성은 확대

■ (관세 형태)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 '보편 관세' 등 관세 적용 형태 및 범위에 따라 항만물동량 영향의 범위와 강도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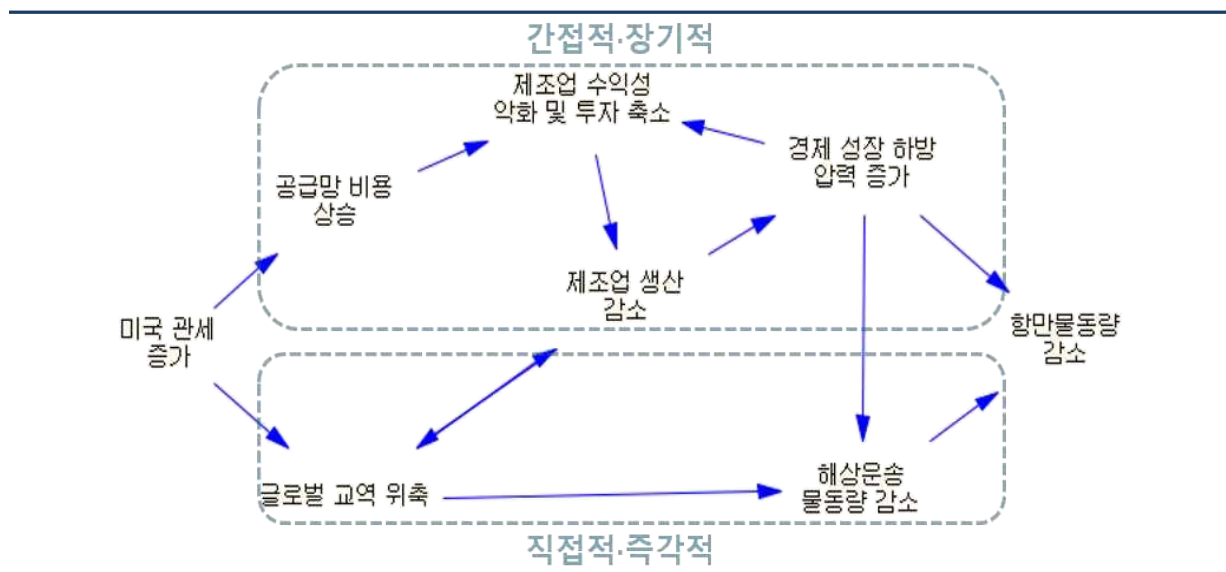
- 품목별 관세 적용 시,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의 영향이 클 전망이며, 쿼터제가 적용되던 철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상호관세는 한-미 FTA 협정으로 영향이 없으나, 보편관세 부과 시 글로벌 교역 위축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항만물동량이 감소할 수 있음
- 한편, 타 국가 대비 낮은 관세 적용 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대미 흑자규모 감소를 위한 석유·천연가스 수입 확대 시 관련 수입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관세 시점) 미국의 관세정책은 내수와 고용,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관세 부과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은 미국 내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자국 내 생산 확대 속도가 더딜 경우 관세 부과 정책이 지연·수정될 가능성이 존재함

■ (영향 경로)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인한 직접적·즉각적 영향과 공급망 비용 상승이 경제성장을 저하로 이어지는 간접적·장기적 영향으로 구분

〈그림 1〉 관세 부과가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



자료: KMI

단기적으로 항만물동량 증가율 감소 전망

■ (컨테이너)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단기적으로 0.74~0.92%p(22.3~27.6만TEU)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출입) 수출입 물동량 증가율은 시나리오에 따라 0.80~0.99%p(14.1~17.5만TEU)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환적) 환적 물동량 증가율은 시나리오에 따라 0.59~0.73%p(8.2~10.1만TEU)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환적은 컨테이너 선사 운항 계획, 제3국 간의 교역 변화 등 다양한 결정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출입 대비 상대적으로 영향을 작게 받음

■ (비컨테이너) 비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단기적으로 1.08~1.34%p(620 ~768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건화물 물동량 증가율은 시나리오에 따라 1.31~1.62%p(427~529만톤), 액체화물 물동량 증가율은 0.50~0.61%p(193~239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건화물 물동량이 액체화물에 비해 국내 GDP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표 1〉 美 관세부와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항만물동량 영향 전망

(단위: %p)

구분		물동량 증감률 변화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컨테이너		수출입	-0.80	-0.85	-0.99
		환적	-0.59	-0.63	-0.73
		계	-0.74	-0.79	-0.92
비 컨 테 이 너	건화물	수출	-1.13	-1.21	-1.41
		수입	-1.18	-1.26	-1.47
		소계	-1.31	-1.40	-1.62
	액체화물	수출	-0.48	-0.51	-0.59
		수입	-0.37	-0.39	-0.46
		소계	-0.50	-0.53	-0.61
	계		-1.08	-1.15	-1.34

주1: 현대경제연구원('24.11)의 트럼프 정부 관세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 GDP 증가율 영향을 토대로 분석

주2: 시나리오1은 미국의 對중국 관세 60% 적용,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1 하에 중국의 보복관세 60% 적용, 시나리오3은 시나리오2 하에 미국의 세계 나머지 국가에 보편관세 10% 적용

자료: KMI

항만시설 기능확대 등 중장기 공급망 변화 대응 필요

■ (인프라) 관세를 통한 미국의 산업 보호 정책과 미 선박법,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등 해운력 강화 전략의 종합적 영향에 대응 필요

- 공급망 리스크 완화 효과보다 공급망 압력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부산항 등 주요 항만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확대와 생산기지로의 전환을 통해 글로벌 제조수요 유치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도) 대외 불확실성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위해 항만시설 범위와 기능을 국가경제 지원 관점으로 확대

- (항만법 개정)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과 미래 에너지 등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들이 항만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항만자유무역지역에 농산물, 수산물 등 전통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자유로운 부가가치 가공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산업) 미국 내 제조 활성화 정책을 적극 활용, 국내 하역장비 제조업의 미국 하역장비 시장 진출 적극 추진

- 미국 항만 하역장비의 국산화 정책(바이든 행정부에서 약 20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지가 예상되며, 최근 자동화 필요성이 강조됨
- * '23년 기준 미국 주요 25개 항만의 안벽 크레인 대수는 539대 야드 크레인 약 1,900대 추정
- 최근 Mitsui 미국 자회사(Paceco) 장비제작 재개, Liebherr은 미서부 항만에 크레인 2대 공급을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미미함
- 이에 한미 고위급 회담에 의제화 추진,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 기업 발굴 및 기술력 제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R&D) 확대 등이 필요함

■ (다변화) '차이나 플러스 원' 등에 대비, 항만 물동량의 역내 의존도 저감

- 공급망 변화에 따른 동남아 등 먼 거리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생산성, 비용, 시간 등)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동남아 인접 항만 대비 서비스 차별화를 추진해야 함
- 특히 중국 우회수출 관세 부과 시 극동-중미, 극동-남미 환적 대비 동남아 및 서남아 환적 증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인근 환적항만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임
- 장기적으로는 북극항로 이용에 대비하여 시범운송 재개, 최적 항로 모색, 필요 항만 인프라 확보, 규제·통제 및 절차 검토 등 실질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물류) 국제물류·공급망 영향 전망 및 대응방안

이언경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장

(eklee@kmi.re.kr/051-797-4682)

김동환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장

(kdong@kmi.re.kr/051-797-4913)

성현정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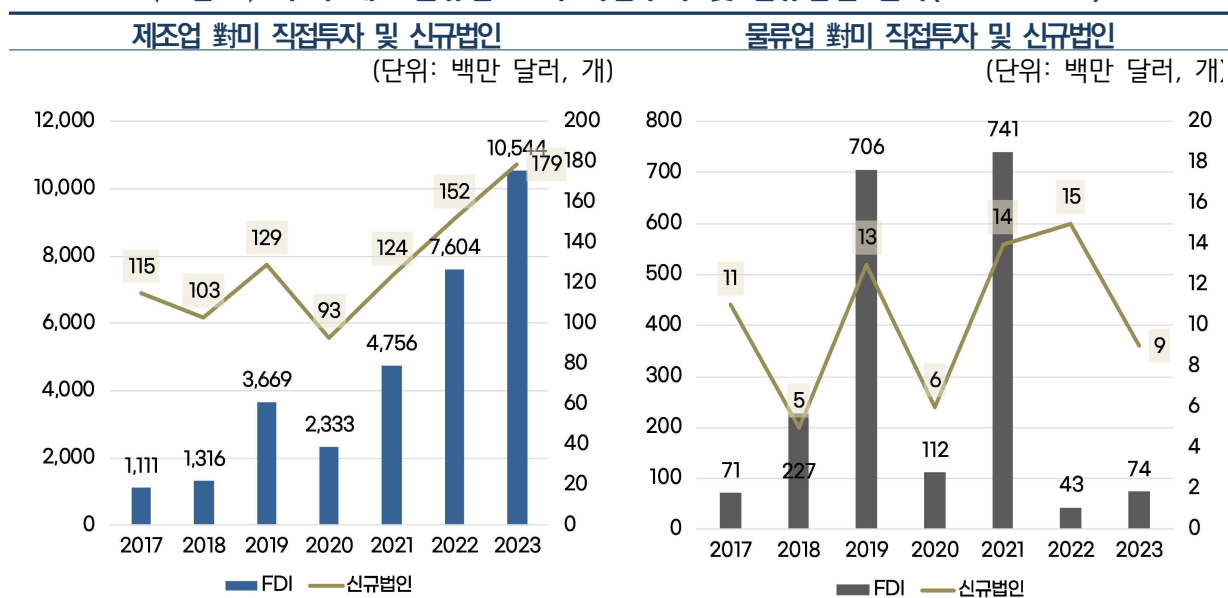
(hjsung@kmi.re.kr/051-797-4648)

트럼프 1기, 미-중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반 對미 직접투자 및 북미 지역 제조인프라 구축 확대

■ 미-중 무역갈등 및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조치 확대에 따라 對미 해외직접투자 및 현지 생산인프라 지속 증가

- 트럼프 1기 자국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조치 본격 시행으로 온쇼어링 및 니어쇼어링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USMCA 체결을 통해 북미 시장의 생산거점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이러한 조치로 우리 제조·물류기업 또한 미-중 무역분쟁('19) 이후 본격적으로 對미 투자를 늘려 갔으며, 트럼프 1기 집권(2017년) 이후 2023년까지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46%에 달하는 증가율로 지속 증가함

〈그림 1〉 우리 제조·물류업 對미 직접투자 및 신규법인 변화(2017-202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기반 저자 재구성

■ 미 보호무역주의 정책 및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미국을 비롯해 멕시코·캐나다 등 인접국가를 대상으로 생산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경을 통해 미 시장 직접 수출 형태 확대

- 자동차 및 이차전지 관련 우리 제조기업은 멕시코·캐나다를 대상으로 미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국경 간 운송을 통해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했음
- 이에 북미지역 내 우리 제조업 증가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했으며 물류센터 운영 및 내륙운송(트러킹, 철송) 등 신규 물류사업에 대한 기회로 우리 물류기업의 현지 진출이 이어지고 있음

■ 글로벌 생산기지 분산으로 물류 거점의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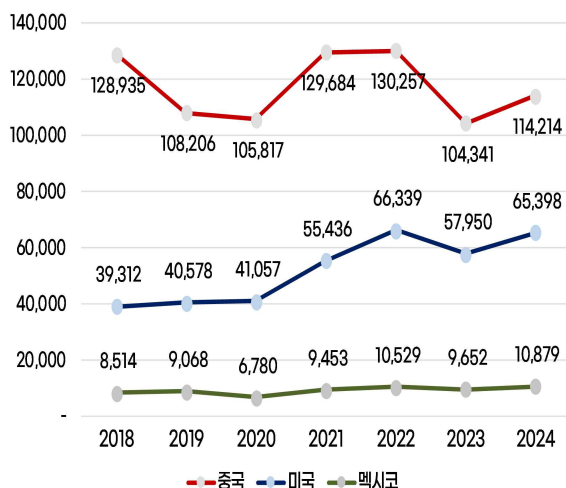
- 트럼프 1기 미-중 무역분쟁과 고율 관세 부과 조치는 글로벌 기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탈중국(China+1)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분산되고 생산기지의 지역 다변화가 발생함
- 특히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탈중국(China+1)’ 전략과 디리스킹(de-risking) 기조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생산기지가 북미, 아세안, 인도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20년 이후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규모는 對중 수출액은 축소된 반면에 對미 수출액은 크게 증가하였음
- 이에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는 과거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미 연결축에 집중됐으나, 멕시코, 인도,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물류거점의 분산 및 다변화됨

〈그림 2〉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액 및 수출국 변화(2018-2024)

우리나라 對중국·미국·멕시코 중간재 수출액 변화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국 순위 변화

(단위: 백만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위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2위	베트남	홍콩	미국	베트남	미국	미국	미국
3위	미국	베트남	베트남	미국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4위	홍콩	미국	홍콩	홍콩	홍콩	홍콩	홍콩
5위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6위	대만	대만	대만	대만	대만	대만	대만
7위	인도	인도	인도	인도	인도	싱가포르	인도
8위	싱가포르	필리핀	멕시코	싱가포르	싱가포르	인도	싱가포르
9위	필리핀	싱가포르	싱가포르	멕시코	멕시코	호주	호주
10위	멕시코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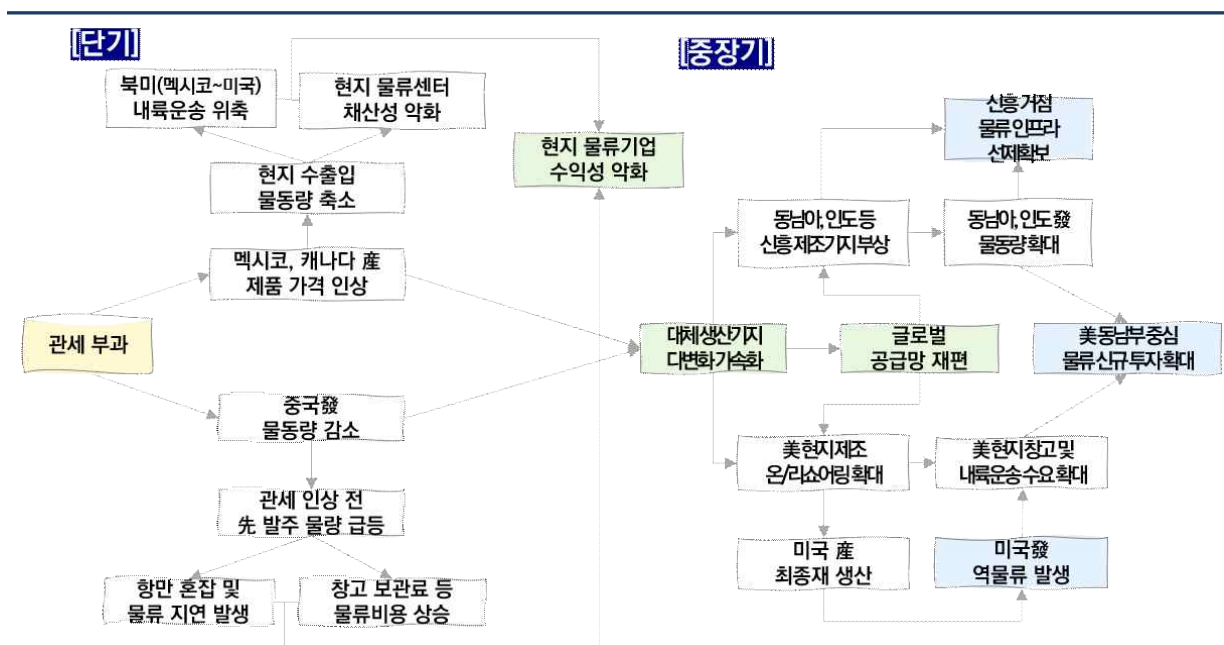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기반 저자 재구성

트럼프 2기, 단기간 미 생산기지 이전 가능성은 낮으나, 관세 부과 본격 시행 및 장기화시 미 현지 생산 확대로 내수 물류시장 성장 전망

■ 관세 조치시 비용 효율성 저하로 단기간 내 생산인프라 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 재고 수요 증가로 수입 물동량 증가 전망

- 트럼프 정부의 보편 관세 등 관세 부과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생산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기존 생산인프라 이전 및 신규 인프라 구축 등 단기간 내 대규모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대부분의 기업들이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미 현지 생산인프라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공급망 재편 의사결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에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조치의 영향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본격적인 관세 부과 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중심으로 재고 확보를 위한 미 수입 물동량이 급등할 우려가 있으며, 창고 보관료 상승 및 물류 지연 발생 등 물류시장 혼잡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그림 3〉 관세 부과가 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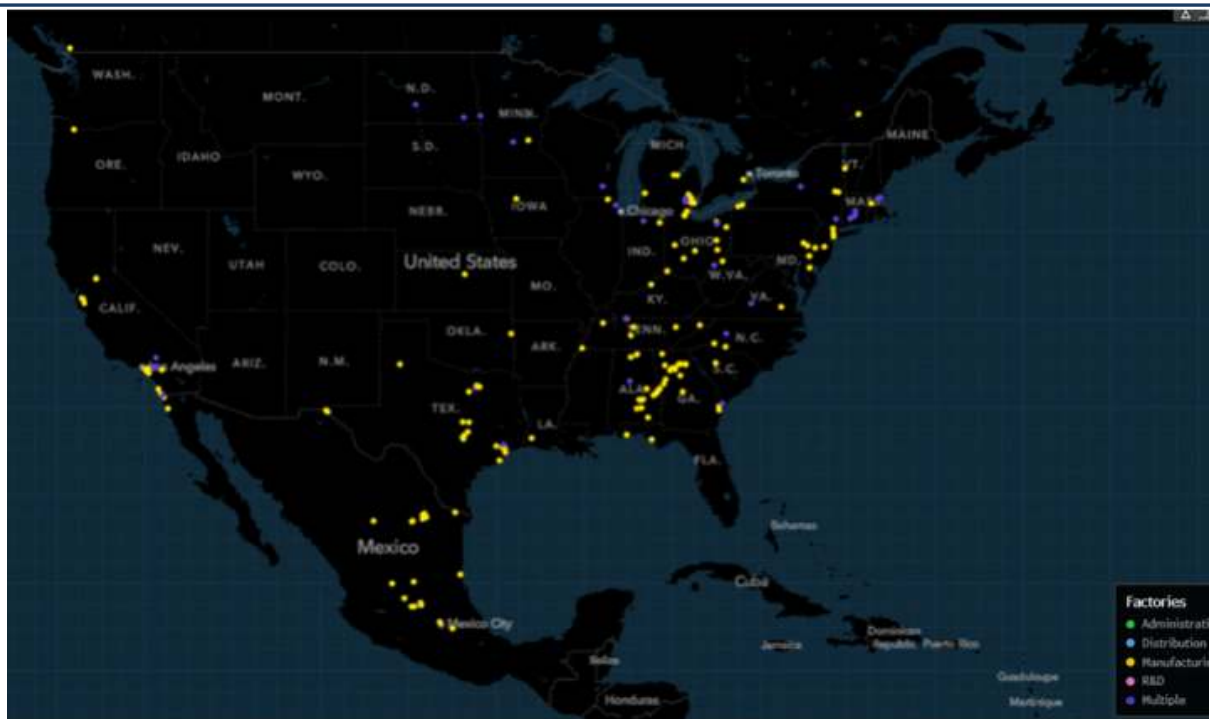


자료: KMI

■ 관세 부과 정책 장기화 시 기존 생산인프라 이전 및 신규 생산시설 구축 등 현지 생산기반 확대로 미 시장 내수 물동량 지속 증가 전망

-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미 제조 기반 강화로 내수 물동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관 및 철송·트러킹 등 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우리 기업 생산인프라가 집중된 미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인프라 투자 확대 및 현지 물류사업 기회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인 관점에서 탈중국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제3국 우회 수출 확대로 인도, 남미 등 신흥 시장의 물류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류거점 다극화 현상 가속화 전망

〈그림 4〉 미국·멕시코 진출 우리 제조기업 생산인프라 현황



자료 : Bloomberg

보편관세 도입 시 미 전체 수입물동량 감소 예상, 對중국 관세 부과 확대로 중간재 수출 감소 등 공급망 재편 가속화 전망

■ 보편관세 10% 부과로 미국 전체 수입물동량의 5~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 미 수출입 물류시장 규모 축소 전망

-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전반적인 수입물동량 감소 및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공급망 구조의 변화 예상됨
- 보편관세 도입으로 미 시장 수입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 현지 생산확대로 내수 물류시장 성장 전망됨

■ 對중국 관세 부과 시 중국의 對미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우리 기업의 對중 중간재 수출량 감소 및 공급망 재편 가속화

- 對미 중간재 수출 지속 증가 및 對중 중간재 수출 규모 하락으로 중국 물류시장 의존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對미 수출량 감소의 영향으로 우리 기업의 對중 수출량(중간재) 감소 등 중국시장 의존도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태국, 인도 등 아세안 국가를 비롯해 남미 등 신흥 제조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1〉 美 관세부과 시나리오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및 물류시장 영향

시나리오 구분	대상국가	제조·물류인프라	수출입 물동량
보편관세 10%	미국	생산·물류인프라 ↑ (미 내수시장 확대)	수입량 ↓
	아세안	생산·물류인프라 ↑ (미 시장 수출량 증가)	수출량 ↑ (미 직접수출 증가)
관세 부과 캐나다·멕시코 25%	미국	생산·물류인프라 ↑ (미 생산기지 확대)	수입량 ↓ (캐나다·멕시코발)
	캐나다·멕시코	생산인프라 ↓ (미 생산기지 이전)	미국발 수출량 ↓ (제3국 우회수출)
對중국 관세 10%	중국	생산인프라 ↓ (제3국 생산기지 이전)	중간재 수출량 ↓ (가격 경쟁력 하락)
	아세안	생산·물류인프라 ↑ (동남아 우회수출)	중간재 수출량 ↑

자료 : KMI

물류공급망의 안정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 민관협력 기반 물류인프라 공동투자 확대 등 리스크관리 고도화 필요

■ 글로벌 물류거점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으로 물류 네트워크 유연성 확보

-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기업의 온/리쇼어링으로 美 현지 생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과거 아시아에서 생산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에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소비하거나 미국·중간재 역수출 발생 등 물류 네트워크 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요구됨
- 이에 우리 이차전지 및 자동차 제조기업의 美 현지 생산거점이 집중된 동남부 중심으로 신규 물류거점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관점에서 서베너항, 잭슨빌항, 찰스턴항 등 동남부 주요 항만 대상 물류인프라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 한편, 脫중국 가속화에 따라 대안으로 낮은 인건비와 풍부한 자원을 갖춘 베트남, 인도, 동유럽이 부상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우리 제조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이 예상돼 현지 물류 수요 증가에 따른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함
- 현지 기업의 국내 해상 운임 변동성 증가와 특정 경로 운임 상승에 대비해 장기 계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운송량 및 경로를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계약 체계를 도입하여 유연한 물류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함

■ 공공부문-기업 상호 협력 기반 물류인프라 투자 확대 및 추진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 고도화 방안 필요

- 글로벌 전반에 보호무역 기조와 무역 갈등으로 국가 간 관세전쟁과 보복 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공급망 리스크에 즉각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간 협력과 민관 소통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체계화가 요구됨
- 美 현지 시설투자 압박으로 민간기업의 신규 물류투자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과 기업이 협업해 안정적인 물류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 수출입 경쟁력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함
- 또한 美 현지 기 진출한 우리 기업과의 상호 경쟁력 강화와 물류 생태계 확장을 위해 현지 시장을 선점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 사업 추진 및 현지 물류 이슈에 공동 대응을 위한 상생협의체 조성 등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별첨 1. 주요 통계

〈별첨 표 1〉 트럼프 Agenda 47과 연계된 2.0 행정명령

구분	공약 (Agenda 47)	행정명령	시행일자
국경 · 이민	남부 국경 장벽 완성 및 국경 보안 강화	미국-멕시코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	25.01.20.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및 비자 규제 강화	관타나모 이민자 수용소 확장	25.02.10.
	'멕시코 잔류 정책' 부활	멕시코 잔류 정책 재개	25.01.22.
	이민자 수용도시 연방 지원금 중단	연방 정부의 불법 이민 지원금 중단	25.02.01.
	취업 비자(H-1B) 제한 및 미국인 노동자 우선 정책	취업 비자 제한 정책 시행	25.02.03.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출생 시민권 폐지	25.01.23.(법원 중단)
경제 · 세금	법인세 감면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연방 공무원 해고 절차 완화 및 정부 규모 축소	25.02.01.
	팁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팁 소득 면제 법안 추진	25.03.01.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및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미국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설립 추진	(의회 승인 필요)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멕시코, 중국, 캐나다산 수입품 관세 부과	25.02.04.
	기존 환경·산업 규제 철폐	전기차 보급 목표 철회 및 연방 환경 규제 완화	25.02.05.
	연방기관 축소 및 '딥 스테이트' 개혁	연방 정부 인력 감축 및 고용 제한	25.03.01.
에너지 · 환경	에너지 독립 및 석유·천연가스·석탄 생산 확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및 알래스카 원유 사추 확대	25.02.07.
	파리기후변화협정 재탈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25.02.15.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및 화석 연료 산업 보호	연방 전기차 보조금 폐지	25.02.10.
	그린 뉴딜 및 친환경 정책 철폐	바이든 시대 환경 보호 정책 78개 폐지	25.02.15.
외교 · 군사	미국 내 정제수 및 원자력 발전소 확대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허가 완화	25.03.01.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전략 유지	NATO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25.02.10.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및 러시아와 협상 추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 개시	(협상 진행 중)
	대만 지원 확대 및 대중(對中) 강경책 유지	중국과의 기술 협력 차단 및 공급망 탈중국화	25.02.20.
사회 · 법질서	국방비 증액 및 미군 현대화	미군 내 '젠더 급진주의' 제거 및 백신 거부자 재입대 허용	25.02.15.
	경찰 지원 확대 및 치안 강화	연방 치안 강화 및 경찰 예산 확대	25.02.10.
	강력 범죄자에 대한 사형제 확대	강력 범죄자 사형제도 확대	25.02.12.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보호	'반가독교 차별' 철폐 조치	25.02.01.
보건 · 복지	WHO(세계보건기구) 탈퇴	WHO 탈퇴 및 지원 중단	26.01.27.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반대	연방 공공기관 내 백신 의무화 철회	25.02.20.
교육 · 문화	연방 정부의 교육 개입 축소	연방 정부 교육 개입 축소 및 지방 자치 강화	25.02.28.
선거 · 정부 개혁	전자 투표기 사용 금지 및 종이 투표지 사용	연방 선거 개혁을 위한 법률 검토 착수	25.03.15.
기술 · 미래 산업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미래 기술 투자 확대	AI 및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	25.03.10.
	미국 우주군 강화 및 우주 개발 확대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착수	25.04.01.

자료: DonaldJTrump (<https://www.donaldjtrump.com/platform>)(검색일 : 25.02.17.), The Guardian, All the executive orders Trump has signed so far(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jan/29/donald-trump-executive-orders-signed-list?utm_source)(검색일 : 25.02.17.)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정리

〈별첨 표 2〉 우리나라 對세계 수산물 수출 영향 분석 결과(SARIM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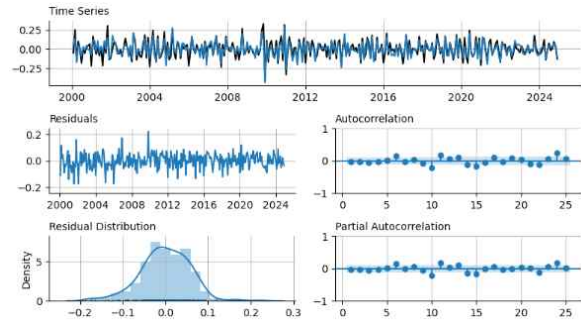
對세계 수산물 수출 영향 분석 결과

```

=====
SARIMAX Results
=====
Dep. Variable:      export_w      No. Observations:      299
Model:             SARIMAX(1, 0, 2)x(0, 0, [1], 12)      Log Likelihood      432.616
Date:              Sun, 16 Feb 2025      AIC      -845.232
Time:              10:54:46      BIC      -808.228
Sample:            - 12-01-2000      HQIC     -838.421
Covariance Type:   robust
=====
              coef      std err      z      P>|z|      [0.025      0.975]
-----
ex_jpn      0.3805      0.121      3.156      0.002      0.144      0.617
export_p    -1.0577      0.072     -14.788      0.000     -1.198     -0.918
rgdp_per     1.4996      0.819      1.831      0.067     -0.105      3.104
production   0.0665      0.030      2.225      0.026      0.008      0.125
oil_brent    0.1687      0.045      3.714      0.000      0.080      0.258
ar.L1       -0.3044      0.346     -0.879      0.379     -0.983      0.374
ma.L1       -0.4091      0.332     -1.234      0.217     -1.059      0.241
ma.L2       -0.4015      0.266     -1.508      0.131     -0.923      0.120
ma.S.L12    -0.4899      0.051     -9.542      0.000     -0.389      0.598
sigma2      0.0032      0.000      9.918      0.000      0.003      0.004
=====
Ljung-Box (L1) (Q):      0.04      Jarque-Bera (JB):      15.09
Prob(Q):                 0.84      Prob(JB):              0.00
Heteroskedasticity (H):  0.55      Skew:                  -0.16
Prob(H) (two-sided):     0.00      Kurtosis:              4.05
=====

```

對세계 수산물 수출 영향 분석 사후 검증 결과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별첨 표 3〉 우리나라 對미국 수산물 수출 영향 분석 결과(SARIM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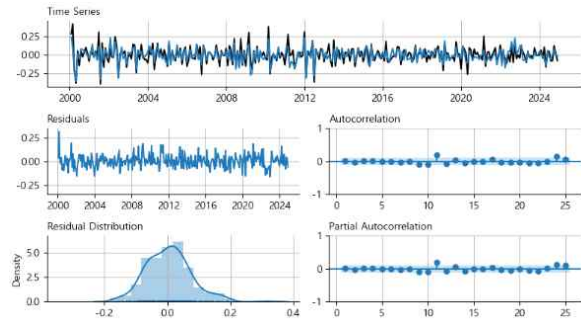
對미국 수산물 수출 영향 분석 결과

```

=====
SARIMAX Results
=====
Dep. Variable:      export_w      No. Observations:      299
Model:             SARIMAX(1, 0, 1)x(1, 0, [1], 12)      Log Likelihood      368.106
Date:              Sun, 16 Feb 2025      AIC      -718.213
Time:              11:02:32      BIC      -684.989
Sample:            - 02-01-2000      HQIC     -704.883
Covariance Type:   robust
=====
              coef      std err      z      P>|z|      [0.025      0.975]
-----
export_p    -0.7578      0.071     -10.739      0.000     -0.896     -0.620
ex_usa      0.0395      0.251      0.158      0.875     -0.452      0.531
rgdp_per     2.5774      0.949      2.715      0.007      0.717      4.438
production   0.1426      0.039      3.681      0.000      0.067      0.219
oil_brent    -0.0032      0.057     -0.057      0.955     -0.116      0.109
ar.L1       -0.0740      0.072     -1.030      0.303     -0.867      0.215
ma.L2       -0.0777      0.032     -27.632      0.000     -0.940     -0.015
ar.S.L12    -0.2679      0.064     -4.205      0.000     -0.143      0.393
sigma2      0.0050      0.000     10.892      0.000      0.004      0.006
=====
Ljung-Box (L1) (Q):      0.01      Jarque-Bera (JB):      9.91
Prob(Q):                 0.92      Prob(JB):              0.01
Heteroskedasticity (H):  1.00      Skew:                  0.30
Prob(H) (two-sided):     0.65      Kurtosis:              3.43
=====

```

對미국 수산물 수출 영향 분석 사후 검증 결과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별첨 표 4〉 미국 시장 내 우리나라와 주요 수출국 간 수출 경합도 지수(ESI)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캐나다	0.55	0.44	0.48	0.55	0.59	0.53
멕시코	0.71	0.59	0.66	0.66	0.66	0.66
중국	0.84	0.87	0.91	0.86	0.90	0.88
칠레	0.25	0.20	0.27	0.25	0.21	0.24
일본	0.51	0.61	0.60	0.51	0.44	0.53
대만	0.52	0.53	0.57	0.62	0.67	0.60
유럽연합	0.59	0.55	0.67	0.56	0.59	0.60
태국	0.88	0.87	1.00	0.66	0.66	0.83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별첨 2. 참고 문헌

- 1) 국제금융센터, 미국의 대중국 관세(10%) 부과 평가 및 전망, Issue Analysis, 2025.2.2.
-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4.10.31.
- 3)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https://www.trade.gov/?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2.25.)
- 4) 산업연구원(KIET),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76호, 2024.12.26.
- 5) 한국무역협회(KITA),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분석, Trade Brief No.2, 2025.2.10.
- 6) 현대경제연구원,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경제, 경제주평, 24-18(통권 976호), 2024.11.7.
- 7) Agenda 47(공화당 대선 공약집)
- 8) DonaldJTrump, <https://www.donaldjtrump.com/platform>(검색일 : 2025.02.17.)
- 9) IMF, World Economic Outlook Policy Pivot, Rising Threats, 2024.10.
- 10) KOTRA, 현지 기관들이 분석한 트럼프 보편관세의 경제 영향 분석,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2024.6.10.
- 11)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trade-wars-erupt-trup-hits-canada-mexico-china-with-steep-tariffs-2025-03-04/?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 2025.3.5.)
- 12) The Guardian, All the executive orders Trump has signed so far,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jan/29/donald-trump-executive-orders-signed-list?utm_source (검색일 : 2025.2.17.)
- 13) Whitehouse, Presidential action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 (검색일 : 2025.2.18.)